

월간 국제 ODA 동향

(2005. 6. 29.)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Page]

- [국제사회의 원조이슈 전개현황 및 주요 원조국의 동향](#) [2]
 - ◆ 시대별로 달리 전개된 원조조류와 최근의 원조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일본 등 주요 원조공여국의 동향 분석

주요토픽

- [일본, 「2005년~2008년 OECF업무 실시방침」 발표\(05. 4.\)](#) [11]
 - ◆ 2005년 4월 발표한 일본의 유상원조 전략문서인 「해외경제협력업무 실시방침」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 [OECD DAC 통계회의\(05. 6.\)의 주요 내용](#) [16]
 - ◆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정의, 군대에 의한 원조, 기술협력의 타이드 실태 등 원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OECD DAC 통계작업반의 정기회의 내용 분석

단 신

- [일본정부, 2005년도 타이드 엔차관 1,000억엔 지원 예정](#) [20]
〈일본의 주간 "經濟協力通信" 보도 자료〉

자 료

- [일본과 프랑스의 유상원조 추이](#) [22]
- [일본 ODA의 정책구성 체계도](#) [24]

이슈분석

국제사회의 원조이슈 전개현황 및 주요 원조국의 동향

I. 국제기구(UN, 개발기구, DAC 등)의 원조동향

1. 80년대까지의 원조동향 : 냉전구도하의 동서관계에 기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의 독립에 따라 이들 국가의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6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지향적 원조가 주류
- 70년대**는 거시적 성장지향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위생·상하수도·영양개선 등 **인간의 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s)**에 대한 원조로 전환
- 8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침체 및 멕시코 등 중남미 개도국의 외채누증 문제 해결이 국제원조사회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긴축재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세계은행 및 IMF 구조조정차관이 원조의 주된 흐름

2. 90년대 초반 : 원조규모 급감 및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심화

- 90년대 초반** 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른 냉전해체로 각 분야의 기술혁신과 규제완화·자유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 및 사회의 통합, 즉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전
- 세계화에 따른 개발의 양극화로 저개발국의 빈곤문제는 오히려 심화
- 한편, 냉전종식으로 국제관계가 극도로 다양화 및 지역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원조공여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게 되는 "**원조피로(aid fatigue)**"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원조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 및 재원조달 부담으로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

*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순지출기준)가 '92년 609억 달러로 정점을 보인 이후 10년간 지속 감소하여 '01년 523억 달러 기록

3. 90년대 후반 : 개도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개시

- '96년 5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新개발전략¹⁾"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국제개발목표(IDG :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설정
- '99년 9월, 세계은행·IMF는 고채무빈국(HIPC)의 외채탕감 및 국제적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빈곤완화전략문서(PRSP)」 채택
 -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는 개도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는 빈곤경감을 위한 3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DAC의 국제개발목표(IDG)를 승계하면서, 고채무빈국(HIPC)의 과도한 부채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PRSP는 고채무빈국에 대한 채무경감구상(HIPC Debt Initiative)의 적용, IDA 및 IMF의 빈곤완화융자(Poverty Reduction Credit)의 공여 여부, 주요 원조국과의 연계 지원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토대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대
 - UN은 제52차 총회('97년)와 제54차 총회('99년)를 통해 개도국들의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
 - OECD 각료이사회(39차, '00년 6월)에서 개도국 외채탕감을 위해 OECD 가맹국의 재정각출과 공평부담을 확인하고,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합의

4. 2000년 이후 : 원조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을 위한 논의 활성화

- '00년 9월, 국제사회는 UN천년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선언」 및 「천년개발목표(MDG)」를 채택하면서 빈곤퇴치를 국제협력의 최우선 공동목표로 인식
 - UN천년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인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고, 8개 대목표 중 하나인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달성 목표 명시
 - * MDG의 8번째 목표로 ODA 증대, 개도국 외채의 경감, 개도국에 대한 비차별적 무역·금융시스템 발전, IT 등 신기술의 대개도국 협력 등을 세부목표로 함

1)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DAC, May 1996

- 제3차 최빈국회의('01. 5월)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 OECD DAC('01. 4월)에서는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화, 고채무빈국에 대한 채무 경감구상(HIPC Debt Initiative)의 지속적 추진 등을 결의

□ MDG 달성을 위한 개발자원 확보 노력 강화

- UN의 「몬테레이 개발자원 정상회의」에서 개발자원 확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에서 동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 재확인
- '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자원정상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밀레니엄선언과 국제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제 수립과 개발자원 확보에 역점을 두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도출 → 선진국, ODA/GNP비율²⁾ 0.7%가 되도록 원조 확대 노력
- '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는 바, '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모색. 동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고, 특히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반감시키겠다"는 천년개발목표 및 몬테레이 합의(원조액 확대)를 재확인하고, 자연환경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

5. 최근 :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강화

- MDG 등 빈곤경감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05년 2월 열린 파리고위급포럼(HLF)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채택
- 동 회의는 몬테레이 합의에서의 실천사항 이행을 위해 각국 각료급 이하의 고위직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참가하는 **민관협의체(forum)성격의 회의기구**로, MDG 중간평가('05년 9월 UN정상회담) 준비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등 91개국 각료급 이하의 정부대표와 세계은행 등 26개 국제기구, EURODAD 등 14개 비정부기구가 참가

2) 국제사회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각국간 비교하거나, 원조목표를 제시할 때 ODA/GNP비율 또는 ODA/GNI비율을 이용하고 있음(OECD DAC에서는 ODA/GNI비율 0.7%, 2002년 몬테레이 합의에서는 ODA/GNP비율 0.7%를 선진국의 원조목표로 설정)

- 고위급포럼은 '03년 2월 로마에서 1차로 개최되어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위한 로마선언을 채택
-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가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측정을 위한 12개 진도지표와 동 진도지표에 대한 각각의 수량 목표를 설정 (5개 진도지표에 대해 2010년까지를 달성시한으로 함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가지 중점추진과제

-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 ②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harmonization)
- ③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향 (alignment)
- ④ 원조의 결과지향 (results)
- ⑤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책임 (mutual accountability)

- 동 선언은 '05년 9월 MDG 이행 중간평가를 위한 UN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선진국들이 MDG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평가됨

II. 주요 선진국의 최근 원조동향

1. 세계의 원조공여 현황

- '04년도 전세계 순ODA(순지출*) 규모는 877억 달러(DAC회원국 786억 달러)로 원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음.
 - * OECD ODA통계상 순지출(Net Disbursement)은 차관의 경우 당해 년도 상환금액은 제외하여 계상
- 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순ODA 규모가 '00년도 UN 천년개발목표(MDG) 및 '02년 몬테레이합의(선진국이 ODA/GNP비율을 0.7%까지 확대) 등으로 '02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

- OECD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러한 **ODA의 증가추세가 2005~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① **IDA에 대한 출연금 증대** (2005년 2월 원조국들은 IDA에 180억 달러를 출연키로 합의)
 - ② **이국간원조예산의 증가** [미국의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ODA/GNI 비율을 2012-13년까지 0.7%로 늘이기 위해 이국간원조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음]
 - ③ **쓰나미(津波) 원조의 증가**
 - ④ **채무구제의 증가** ('04년말 이라크에 대한 150억 달러 채무구제, '05년 6월 HIPC 18개국에 대한 400억 달러 채무구제)

2. EU회원국의 원조동향

가. EU회원국의 ODA 규모

- '04년 순ODA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429억 달러**로 전세계 ODA의 **49%**에 해당하며, 동 비율 지속적인 증가 추세
 - '04년 ODA 규모증가는 오스트리아의 채무구제, 그리스의 기술협력 및 긴급구호증가, 룩셈부르크의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 영국의 프로그램사업지출증가 및 채무구제 등에 기인
- EU회원국 중 **DAC 회원국인 15개국의 ODA/GNI 비율은 0.36%**이며, 각국은 '06년까지 EU목표인 **0.39%**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02년 UN의 몬테레이 개발재원정상회의에서 EU의 주요국은 각국의 목표를 발표
 - 프랑스 : '12년까지 UN목표 0.7% 달성
 - 영국 : '13년까지 UN목표 0.7%를 달성
 - 스웨덴 : '06년까지 1%를 달성
 - 벨기에 : '10년까지 UN목표 0.7% 달성
 - 스페인 : '08년까지 0.5% 달성

나. EU의 원조정책목표 및 원조의 특성

- EU회원국들은 빈곤감축 등 UN의 새천년개발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지배구조의 건전성 등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도국을 세계경제 질서에 동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는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EU의 대내외적인 정책을 반영한 수원국별 "국별전략백서(CSP : Country Strategy Papers)"를 작성
 - 백서 작성과정에서 EU집행위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반 정책들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대외원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
- EU회원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EU회원국들이 아프리카를 UN의 천년개발목표의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

3. 미국의 원조동향

가. 미국의 ODA 규모

- '04년 순ODA 규모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90억 달러로 단일국가로서는 최대규모이며 '04년 전세계 ODA의 22%를 차지
 - '04년 미국의 ODA 규모증가는 IDA와 세계은행에 대한 출연금 증대, 아프가니스탄(8.8억 달러) 및 이라크(29억 달러)에 대한 원조증대 등에 기인
- 절대금액에서는 최대이나 '04년도 미국의 ODA/GNI 비율은 0.16%로 EU의 절반수준
- 2002년 UN 개발재원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7%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미국은 구체적인 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대신 USAID와 별도로 특별원조기금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를 설치하고 2006년까지 ODA규모를 50억 달러 증대기로 함

- 그러나, 2004년에 이르러서야 MCA를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지원승인금액은 3.3억 달러에 불과 (집행금액은 없음)
- 2005년 3월 : 마다가스카르 앞 4년간 1.1억 달러 지원승인(최초)
- 2005년 5월 : 온두라스 앞 5년간 2.2억 달러를 지원승인

나. 미국의 원조정책목표 및 원조의 특성

- 냉전시대 미국의 원조는 우방의 결속을 위한 정치적·전략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원조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과거 유럽과 제3세계 우선정책에서 중동, 동유럽 및 중남미의 민주주의 정착, 시장경제의 구축, 원조를 통한 미국기업의 무역환경개선 등이 원조의 목표가 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ODA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보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의회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이국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구조는 여타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편차가 적으며, 특히 일본(아시아), EU(아프리카) 등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한 원조집중현상은 없음
- 다만,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고 있는 바, 이는 지리적 근접성 및 향후 경제공동체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일본의 원조동향

가. 일본의 ODA 규모

- '04년 순ODA 규모는 89억 달러로서 전세계 ODA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원조국('00년 이전까지는 세계최대원조국)이나 '04년도 ODA/GNI 비율은 0.19%로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 한편, 일본의 '04년도 총ODA(총지출) 규모는 161억 달러로 '03년도에 비해 24.5% 증가, 이는 이라크 재건원조 및 HIPC에 대한 채무구제가 늘어났기 때문
- 전세계 순ODA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00년(23%)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외환위기로부터 회복한 수원국들의 ODA 차관 상환에 기인

나. 일본의 원조정책목표 및 원조의 특성

- 과거 일본의 ODA 정책목표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 이후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목적외에 정치, 안보 및 인도적 목적 등 다목적인 ODA 지원으로 변화
- '03년 "ODA 大綱(ODA Charter)"이 개정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와 번영 확보"라는 ODA 정책목표를 규정
- 일본은 빈곤퇴치라는 국제적 원조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확대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경제·사회인프라 중심의 유상원조를 선호하고 있음.
 - 이는 ODA 대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유상원조가 일방적 시혜가 아닌 개도국의 자조노력(self-help effort)을 촉진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ODA 책정시 수원국의 인구규모와 연계함으로써 일본의 무역·투자를 위한 잠재적 시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일본 ODA의 주요 수원국들('03년 기준)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점이 명확해짐.
 - 또한 '03년 개정된 ODA 대강에서는 중점지역으로 아시아를 명기하여 원조를 통한 자국의 이익(번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 '05년 들어 일본은 ODA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 블록화"를 피하려는 도구로 활용하는 한편, 아시아 중심의 원조무대를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넓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확대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자료출처]

- 세계경제, "유엔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2. 4.
오상식, "주요국제문제분석 -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과 우리의 과제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5-11)", 외교안보연구원, 2005. 5. 9.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 "70년대 이후 개발원조의 흐름과 최근 선진 원조국들의 지원실적," 2000.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정책방향 - Part II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2004. 7., pp. 1~15
한국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 "2004년 DAC 회원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개요", 2005. 4. 13.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 "일본 ODA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05. 6.
ファイナンス, わが国のODAと国際的な援助潮流, 2005. 1. 및 2005. 3.
JICA, "援助の潮流がわかる本, 2003
MCA, "The Millenium Challenge Account", www.mca.gov
OECD DAC,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May 1996
OECD,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4 (Preliminary data)", 11 April 2005.
The White House, "The Millenium Challenge Account",
<http://www.whitehouse.gov/infocus/developingnations/millennium.html>
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1995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목차보기

주요토픽 1

일본, 「2005년~2008년 OECF업무 실시방침」 발표('0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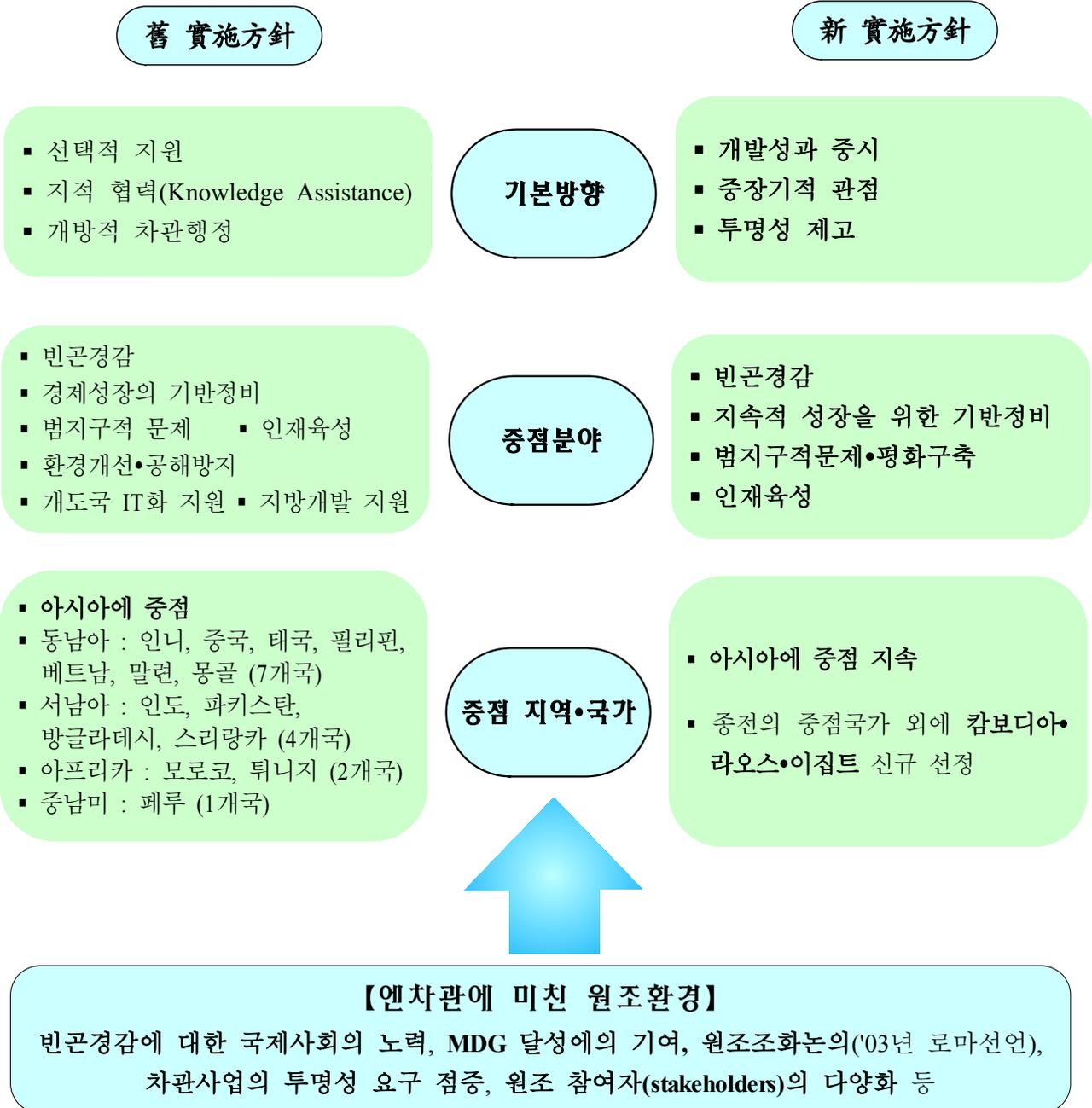
【요 약】

-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와 엔차관과의 연관성 강조
- 「기본 방향」으로 개발성과, 중장기적 관점, 투명성 제고를 설정
- 빈곤경감, 인프라 기반정비, 범지구적 문제·평화구축, 인재육성에 중점지원
- 아시아를 중점 지역으로, 캄보디아·라오스·이집트를 중점국가에 추가
- 일본의 경험·지식·Know-how의 활용을 기본 전략으로 내포

I. 해외경제협력(OECF)업무 실시방침 개요

- '05년 4월 발표한 OECF업무 실시방침("이하 방침")은 일본의 유상원조(엔차관)에 대한 3년간의 중기전략문서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작성하여 외무성 장관의 결재를 통해 공표됨 [금번 방침은 '05년 4월에서 '08년 3월까지 적용]
-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라는 ODA대강의 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실시방침의 목표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일본 ODA대강(현장) 및 ODA중기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유상원조 지원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에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축으로서 엔차관이 가지는 의의 및 개도국앞 엔차관의 공여 논리, 지원시의 기본방향, 중점부문, 중점지역 및 국가, 고려사항을 명시

II. 주요 구성내용 비교도



III. 실시방침의 주요 내용

1. 엔차관의 의의

- 상환의무가 있음에 따라 사업선정 등에 있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및 자조노력(self-help efforts) 촉진
- 상환되는 재원임에 따라 대형사업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MDG 달성에 기여
- 수원국의 자금의존 패턴을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유상원조에서 민간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교량 역할 수행
- 원조자금의 변동성은 수원국의 지속적인 개발노력을 방해할 수 있으나, 엔차관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으로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개발성과 중시 : 개별 사업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빈곤경감 노력(MDG 등), 수원국의 개발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 일본 ODA의 중기정책 및 국별지원프로그램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보다 명확한 개발성과 도출
- 중장기적 관점 견지 : 개발은 수원국의 경제·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속적인 과정임에 따라 성과가 현재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반영하여 사업 실시
- 투명성 제고 : 투명성은 유연하고 적절한 엔차관의 운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발 참여 및 개발성과의 달성에 수원국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

3. 중점분야

□ 빈곤경감

선 정 배 경	지 원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경감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과제 ◆ 국제원조 노력에 부응 ◆ 고용창출이 가능한 지속적 경제성장이 빈곤경감에 필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빈곤경감전략문서(PRSP) 작성과정 조언 및 참여 ◆ 농촌지역 기반정비, 도시의 거주환경 개선, Micro-financing 지원, 빈곤층 거주지역의 방재사업 지원

□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정비

선 정 배 경	지 원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경제성장이 빈곤경감에 필수적이거나, 개도국은 민간부문의 활동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인프라 투자 여력 부족 지방과 도시간의 지역격차가 빈곤문제 악화 요인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인프라 정비(운수·물류, 정보·통신, 灌溉, 상하수도 등) 정보격차 해소위한 IT 및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방개발,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 범지구적 문제 및 평화구축 지원

선 정 배 경	지 원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 지역분쟁, 에너지문제, 전염병 등은 국제사회 전체에 큰 영향 개발에 따른 부의 영향 회피·경감 등 환경과 개발의 양립 도모 지진해일 등에 의한 재해 복구 및 방재에 국경을 초월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가능에너지 등 온실가스 억제 사업 중점 지원 자연환경보전(삼림보전·사막화 방지) 사업 지원 재해복구, 방재사업 지원(일본의 기술, 경험, Know-how 십분 활용) 분쟁(위협)국 및 주변국앞 예방적 지원

□ 인재육성

선 정 배 경	지 원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을 지원하는 인적자본 확보 및 인프라 정비의 효과 제고를 위한 필요 요건 교육은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와 빈곤경감을 보완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인재육성 지원(교사건립, 교육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원 지원 등) 엔차관 사업에 대한 수원국 실무자 교육 실시

4. 중점국가(중전 14개국에서 17개국으로 증가)

지 역	개발 주안점	중점 지원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개발 빈곤경감 및 경제격차 해소 	①인도네시아, ②중국, ③태국, ④필리핀, ⑤베트남, ⑥말레이시아, ⑦몽고, ⑧캄보디아(新), ⑨라오스(新)
서남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명 이상의 세계 최대 빈곤인구 분포 에너지, 식료, 수자원, 환경 등 범지구적 이슈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역 총 14억명 이상의 인구, 잠재력 큰 거대신흥시장으로 전력, 운수 등 경제인프라 정비 필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 필요 	①인도, ②파키스탄, ③방글라데시, ④스리랑카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변제능력과 거버넌스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의 경제사회인프라 및 민간 및 농업부문에 중점 	①모로코, ②튀니지, ③이집트(新)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경제격차 및 소득격차 확대 → 사회·경제 인프라 지원을 통한 빈곤경감 지원 	페루

5. 사업 추진시의 주요 고려사항

□ 정책·제도개선 노력 및 현지기능 강화

- 수원국의 개발계획(PRS)에 기반한 원조실시
- 국별·부문별 분석 및 정책대화 강화, 수원국의 정책·제도 입안 능력 육성
- 유상자금협력촉진조사(SAF), 개발정책·사업지원조사(SADEP)를 통한 지식 협력(knowledge assistance) 및 기술 지원 실시
- 차관사업에 「현지 ODA Task Force*」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국제기구·他공여국과의 협의를 통한 현지기능 강화

* 재외공관과 JICA, JBIC 등 원조실시기관의 '현지사무소'를 주요 멤버로 하는 「現地ODA 태스크포스('현지TF)」는 원조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실시까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회의체로, ①수원국의 개발 Needs 조사·분석, ②원조정책의 입안 및 검토(국별원조계획, 중점과제·분야별 원조방침, 정책협의실시), ③후보사업 발굴의 역할을 수행함

□ 평가의 충실(개발성과중시)

- 국제적 기준에 바탕을 둔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사전 및 사후평가 실시
- 사후평가지 모든 안전에 대해 외부평가의 결과 및 개도국 관계자·제3자의 의견 공표 추진
- 중간점검(review) 및 사후모니터링 제도 도입 추진

□ 채무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중점

- 거시경제조사, 경제발전상황, 재정상황외에 채무부담능력을 포함하는 채무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 현재의 채무상환능력(신용도) 자체보다도 원조자금을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룰 경우, 대외채무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 → 원조자금 제공 가능

[자료출처 : 海外經濟協力業務實施方針, 國際協力銀行(JBIC), 2005. 4.]

[작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목차보기

주요토픽 2

OECD DAC 통계회의('05. 6.)의 주요 내용

【요 약】

- 인도적 원조의 정의에 대한 협의
- 분쟁, 치안 및 평화유지 관련 원조의 ODA 포함
- 기술협력(TC)의 정의 및 독립적 기술협력(FTC)의 타이드 실태 조사
- CRS 통계와 DAC 통계의 통합
- DAC 수원국 리스트 재구성 - Part II 국가 제외 후 단일리스트 구성
- MDG 8, 쓰나미 구호 원조의 이행상황 점검

□ 인도적 원조의 정의에 대한 협의

- '04년 ODA중 '긴급재난구호' 비중이 10%로 상승하여 이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필요, 군대 및 민간단체에 의한 원조가 확대됨에 따라 원조의 정치화 우려 제기, 선진국들이 약속한 인도적 원조의 이행확인 필요 증가

- 인도적 원조를 명확히 정의하여 통계로 집계 → 양적확대에 부응하는 질적수준 확보

○ 인도적 원조의 정의(안)

- "인도적 원조는 **비상재난 또는 후속상황 하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재난대비와 예방, 의료지원,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구호, 정상생활 및 생계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 ◆ 인도적 원조는 인류애,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 비상재난은 UN 또는 국제적십자/녹십자가 인지하는 인재(人災) 또는 자연재해로서, UN 또는 국제적십자/녹십자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상황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난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인도적 원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난방지 및 대비', '재난구호', '복구 및 재건'으로 범주화하였고, 논란이 되는 항목은 10월 정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재난의 정의, 재난대비(재난경보시스템, 재난준비금 출연)의 포함에 대해 논쟁
- 복구 및 재건과 관련한 재난을 6개월로 한정하는 데 다수가 반대(일본 등)

□ 분쟁, 치안 및 평화유지 관련 원조의 ODA 포함

○ 이라크 등 국지적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유지활동 관련 원조를 정의

- '05.3월 DAC 고위급회의(HLM)에서 ①치안제도개선(기술협력) ②민간주도의 평화 복구·분쟁방지 ③소경량화기(SALW) 확대방지를 ODA에 추가하기로 결정
- ◆ '04년 HLM에서는 ④치안예산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⑤치안분야의 민간통제력 강화 ⑥ 소년병문제(기술협력)의 세 항목을 분쟁관련 ODA 사업으로 인정
- ◆ '05년 HLM에서 군병력에 대한 기술훈련, 인권교육, 비UN 평화유지군 활동의 ODA 포함여부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지원분야 코드(CRS코드)에 '분쟁·평화·치안' 항목을 신설하고 하위분류를 정리

- 치안제도관리·개선(①,④항목), 민간주도의 분쟁예방(②,⑤항목), UN 평화유지군 활동(기존 항목), 군인의 민간복귀 및 무장해제(기존 및 ③항목), 지뢰제거(기존 항목), 소년병 문제해결(⑥항목)로 하부 항목을 정리

* UN 평화유지군예산(PKO) 직접출연은 ODA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 후 UN 평화유지군활동으로서 인권, 선거감시, 해산군인 재교육, 사회기반시설 재건, 행정·경찰공무원 교육, 재정·경제안정화 정책 컨설팅, 무장단체 해산, 지뢰제거 활동 등은 이국간 ODA로 인정(UN PKO분담금은 군사·외교적 목적 외의 순수한 ODA를 추출할 수 없어 전체를 ODA에 불포함)

○ 기타 군대의 의료지원, 재해복구 등은 '분쟁·평화·치안' 항목이 아닌 '재난구조 및 재건', '보건' 항목으로 ODA 분류 가능

- 단, 군대에 의한 지원은 군 병력이 국내에 주둔했을 경우 소요되었을 비용을 제외한 추가적 비용(순비용)만을 ODA로 보고

□ 기술협력(TC)의 정의 및 독립적 기술협력(FTC)의 타이드 실태 조사

○ 기술협력은 교육, 훈련, 연구, 전문가 파견 등 수원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인적협력 형태의 원조

- 순수한 인적자본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FTC(Free-standing TC)와 유형자산 확대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설계 등의 IRTC(Investment Related TC)로 구분됨
- ◆ TC는 무상지원으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것으로 간주되어 OECD 규제를 받지 않으나 2백만 SDR(약 3백만 달러)이상의 타이드 사업은 사후통지 의무가 있음
- ◆ DAC 회원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13만 SDR(약 19만 달러)이상의 IRTC는 언타이드화 하기로 합의('01)하였으며, 일부 IRTC가 무역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따라 프로젝트 상 세설계, 건축엔지니어링, 구매컨설팅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 주요내용을 사전통보키로 합의('05)

- 기술협력에 대한 DAC 통계범위가 축소되고 타이드 상태도 보고하지 않고 있으나, 연간 지원규모가 200억 달러로 확대되고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권고('01)에 대한 이행확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이드 실태에 대한 조사요구가 증가
- 특히, 구매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96년부터 타이드 보고를 면제한 FTC에 대해 전문가 파견, 연구능력배양(수원국에 똑같은 연구기관 설립), 사업타당성조사의 분야에서 타이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
 - 사무국이 '04년 독일과 프랑스의 CRS보고를 분석한 결과 FTC의 25%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50%는 무관하고, 25%는 불명확 한 것으로 나타남
 - 회원국들은 TC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분류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일본은 FTC의 타이드 실태조사에 대해 TC에 대한 명확한 정의, TC 전체의 타이드현황, FTC의 타이드 실태조사의 단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 상태에서 FTC만 따로 조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주장

□ CRS 통계와 DAC 통계의 통합

- CRS(Creditors Reporting System)는 ODA, OOF 등 개도국으로의 자본이동을 사업별로 분기·연간기준 OECD 사무국에 보고하는 통계시스템
 - 승인(Form1) 및 지출사업(Form2)에 대해 지원국가, 지원기관, 차주국, 승인액, 집행액, 금융조건, 지원분야, 타이드상태, 대출잔액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음
 - ◆ 수은의 Export credit은 Form 1C와 Form 3 형태로 별도 보고
- DAC 통계는 ODA에 대한 연간 집계통계로서 원칙적으로 CRS 개별보고의 승인, 지출, 순지출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그간 CRS 통계의 포괄범위가 낮아 DAC 통계를 독립적으로 보고하여 왔으나, CRS 보고가 충실해짐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두 통계의 통합작업이 진행됨
 -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제공한 CRS 통계를 DAC 통계로 재구성한 결과 기술적으로 전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향후 DAC Table의 재구성, 개념 명확화, 원조의 구분, 타이드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DAC Table에서 5a(기술협력의 지리적배분)는 삭제하기로 합의

□ DAC 수원국 리스트 재구성 - Part II 국가는 제외

- 현행 Part I(ODA)과 Part II(OA)로 나뉘져 있는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Part II를 삭제하여 수원국 리스트를 단일화하기로 합의

- '04 DAC 실무급회의(SLM)에서 수원국리스트를 변경하기로 결정
- 중소득국(1인당 GNI 9,205달러) 이하만을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OA 국가에 대한 통계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고, 개도국의 빈곤감소라는 ODA 통계 목적만을 부각 가능
- 중소득국 중 G8국가, EU회원국, EU가입이 확정된 국가는 제외하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차기 DAC 회의에서 포함여부를 결정
 - ◆ 리비아는 '99년 DAC에서 ODA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두 나라는 '93년 two-part 리스트 도입 시 Part II 국가로 분류됨 (통계작성반은 소득수준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세 나라를 모두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호)

□ MDG 8, 쓰나미 구호 원조의 이행상황 점검

○ UN의 2005년도 MDG 중간점검 보고서 발간 및 국가별 이행상황 보고

- 1990~2015년 사이에 기아인구 비율 반감,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 실시, 교육의 양성 평등 실현, 영아사망률 감소, 산모사망률 감소, HIV/AIDS 확산추세 반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8대 목표추구에 있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현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15년까지의 목표 충족이 어려움을 보고(9월 UN정상회담에 앞선 UN 중간보고서)
- 회원국별로도 각국의 MDG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상황을 발표

○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약속이행을 모니터링

- 지원국가, 승인액, 비상물자 원조, 재해복구 원조, 집행액을 포함한 DAC Survey 를 작성하여 2005. 9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요청

□ 기타 논의내용

- 이라크를 중심으로 급증한 채무구제의 ODA 과다계상 위험, ODA 적격 국제기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원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보험(weather insurance) 지원의 ODA 포함 가능성, 원조국내 난민구호 원조에 대한 통계보고 관행 불일치 등이 기타 의제로 논의됨

※ DAC 통계회의(WP-STAT)는 매년 6월 OECD 본부에서 개최되며, 개도국과 국제개발기구로의 자본이동 통계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DAC사무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내의 Statistics and Monitoring Division(총 13명)이 지원을 담당

[자료출처 : OECD 55차 통계작성반 회의참석, OECD문서 DCD/DAC/STAT/A(2005)2]

[작성 자 : 서정화, jhseo@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일본정부, 2005년도 타이드 엔차관 1,000억엔 지원 예정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가격에서의 수주가 필요〉

□ 타이드 엔차관의 변천

- 일본은 OECD DAC의 언타이드 권고에 따라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언타이드 비율('03년 기준 83.1%)을 높여 왔으나,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99년에 타이드조건의 「특별엔차관」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음
- 특별엔차관제도가 '01년 종료됨에 따라, 타이드 차관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02년 7월 일본기술활용제도(STEP)를 도입하였음. 동 STEP 엔차관은 적용대상국, 원산지기준, 대상분야, 금리 등 지원조건면에서 기존의 특별엔차관보다 완화된 제도로, 일본의 유상차관중 타이드 부분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하여, 일본 기업의 기술 및 Know-how를 활용하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음

* 本邦技術活用条件 또는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으로 표기

□ 2005년도 지원목표로 1,000억엔 예정

- 일본 정부는 STEP을 통한 타이드 엔차관 지원에 중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05년도는 '04년도의 830억엔을 상회하는 1,000억엔 정도의 지원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전언 → '03년도 유상원조 승인액(111억불)의 9%에 해당
- 공여실적(승인기준)의 경우, 도입초기인 '02년도에는 80억엔(1건)으로 저조하였으나, '03년 343억엔(3건), '04년 약 860억엔(5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가격에서의 수주가 STEP 엔차관 확대의 관건

-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수원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타이드 차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특별엔차관**의 최근 입찰(구매계약)에서 응찰가격이 국제가격보다 70%나 높은 사례도 있어 타이드 원조에 대한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특별엔차관 제도 자체는 '01년 종료되었으나, 동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은 현재도 실시(구매계약 등)중임

○ 입찰가격에 대한 수원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국제가격에서의 수주가 요망

- OECD의 규정에서 허용된다면, 일본정부는 수원국의 입찰가격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기업이 국제입찰을 거쳐 수주에 성공했을 때 엔차관을 공여하는 낙찰조건부 지원방식도 고려해 보고 있는 상황

□ 향후 STEP 엔차관 예상사업(經濟協力通信의 자체추정)

- 인도 화물전용철도계획 4,000억엔 등 2건 4,300억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속교통운송사업 800억엔 등 3건 1,220억엔, 베트남 하노이~하이퐁간 철도확충사업 400억엔 등 2건 900억엔, 이집트 고속철도망정비계획 350억엔 등 2건 650억엔, 스리랑카 골항만확충계획 200억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예상

□ 일본 재계 등, STEP 엔차관의 지원조건 완화 요청

- 원산지 규정 세분화 : 현행 30% 이상인 원산지규정(국산화율)을 분야별로 20, 30, 40%로 세분화
- 용자비율 조정 : 현재 총사업비의 85%를 분야별로 80~100%로 구분
- 무상지원제도 도입 및 병행지원 : 대상국에 따라서는 JBIC(일본국제협력은행)내에 무상공여제도(grant facility)를 설치하고, 무이자차관이나 무상자금협력과의 혼합 운용 등을 통해 탄력적 지원

[자료출처 : 經濟協力通信 제1596호 (2005. 5. 25. 발행) 및 제1597호 (2005. 6. 1. 발행)

<http://www.mof.go.jp/jouhou/kokkin/en-shaku-minaosi.htm>

<http://www.mof.go.jp/jouhou/kokkin/en-shaku-minaosi-1.pdf>

<http://www.mof.go.jp/jouhou/kokkin/en-shaku-minaosi-2.pdf>]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정책방향(일본편 pp. 31~33),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1】

일본과 프랑스의 유상원조 추이

- 일본의 원조 : '60년대 이후 연대별로 지속 증가하다, '00년대 초반 다소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증가추세
 - 유상원조비율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점차 증가 추세
 - 전체원조중 유상원조의 비율 : 53.7%('2001) → 54.6%('2002) → 57.4%('2003)
 -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유상원조의 아시아지역 집중 현상 지속
 - 유상원조의 아시아지역 비중 : 91.5%('60년대) → 83.6%('70년대) → 81.2%('80년대) → 81.4%('90년대) → 83.5%('00년대)
 - 유상원조 주요대상국은 인구가 많고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국가
 - 중국(13억명), 인도(10.6억명) 등 7대 수원국이 모두 아시아지역 국가이며, 동 국가에 대한 유상원조가 전체유상원조(2003년기준 총 64개국 지원)의 73% 차지

일본의 10대 유상원조 수원국

(단위 : %)

순위	'60~'69		'70~'79		'80~'89		'90~'99		'00~'03	
	수원국	비중								
1	인도	32.4	인도네시아	21.3	인도네시아	18.8	인도네시아	18.6	중국	14.8
2	인도네시아	18.6	인도	11.5	중국	12.2	중국	14.0	인도네시아	12.9
3	파키스탄	15.3	한국	11.0	필리핀	8.5	인도	10.1	인도	12.5
4	한국	14.3	파키스탄	6.9	태국	7.4	필리핀	9.6	태국	11.5
5	대만	6.6	방글라데시	5.9	인도	6.0	태국	8.4	필리핀	10.2
6	브라질	5.3	태국	5.1	방글라데시	5.7	이집트	4.7	베트남	7.5
7	스리랑카	1.6	필리핀	5.1	한국	5.2	파키스탄	3.8	파키스탄	3.6
8	아르헨티나	1.5	이집트	4.7	말레이시아	4.3	말레이시아	3.3	스리랑카	3.4
9	필리핀	1.1	미얀마	4.7	미얀마	4.0	스리랑카	2.2	페루	2.5
10	베트남	0.6	말레이시아	3.9	파키스탄	3.8	베트남	2.1	브라질	2.3
소계	11.7억불	97.1	64.6억불	80.1	208.6억불	75.9	501.3억불	76.8	191.7억불	81.2

주 : 총지출액 기준이며, 음영처리된 수원국은 아시아국가

□ 프랑스의 원조 : '90년대 중반 정점을 이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02년부터 뚜렷하게 증가 추세

○ 유상원조비율은 '90년이래 지속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 추세

- 전체원조중 유상원조의 비율 : 13.8%('2001) → 17.8%('2002) → 17.7% ('2003)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지역이 주요대상지역이나, 무상원조와 달리 유상원조의 주요 지원지역은 사하라 이북지역인 가운데 '00년부터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 점차 증가 추세

- 유상원조의 아시아지역 비중 : 23.4%('99) → 37.4%('2000) → 40.5% ('2001) → 26.0%('2002) → 59.2%('2003)

○ 아프리카 사하라 이북지역의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식민지국가(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에 유상원조가 집중되었다가, '00년대 들어 인구가 많고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국가로 전환 추세

- 인도네시아(2.2억명), 파키스탄(1.5억명) 등 4개 아시아국가에 대한 유상원조가 전체유상원조(2003년기준 총 58개국 지원)의 41% 차지

프랑스의 10대 유상원조 수원국

(단위 : %)

순위	'60~'69		'70~'79		'80~'89		'90~'99		'00~'03	
	수원국	비중	수원국	비중	수원국	비중	수원국	비중	수원국	비중
1	사하라이남 ¹⁾	18.2	모로코	9.5	모로코	7.6	코트디브아르	14.1	파키스탄	18.8
2	알제리	16.6	인도	8.5	코트디브아르	6.4	카메룬	10.5	코트디브아르	10.7
3	모로코	12.1	인도네시아	7.7	세네갈	5.7	모로코	7.1	인도네시아	10.6
4	유럽 ²⁾	4.7	뉴칼레도니아	7.5	인도	4.6	인도네시아	5.4	튀니지	9.0
5	인도네시아	4.6	튀니지	6.6	인도네시아	4.4	이집트	5.2	모로코	7.3
6	코트디브아르	3.9	코트디브아르	4.8	카메룬	4.0	중국	4.9	카메룬	7.1
7	브라질	3.5	알제리	4.7	말리	3.8	알제리	4.6	콩고	6.7
8	세네갈	3.1	카메룬	4.2	마다카스카르	3.8	튀니지	2.9	베트남	6.4
9	멕시코	3.0	파키스탄	4.0	이집트	3.7	콩고	2.9	중국	5.3
10	튀니지	2.8	폴리네시아	3.3	중국	3.1	가봉	2.6	이집트	2.8
소계	9.3억불	72.5	20.0억불	60.8	49.8억불	47.1	95.2억불	60.3	25.2억불	84.7

주 : 1. 사하라이남 또는 유럽에 지원된 유상원조중 특정국가로 분류되지 못한 총지출액

2. 음영처리된 수원국은 아시아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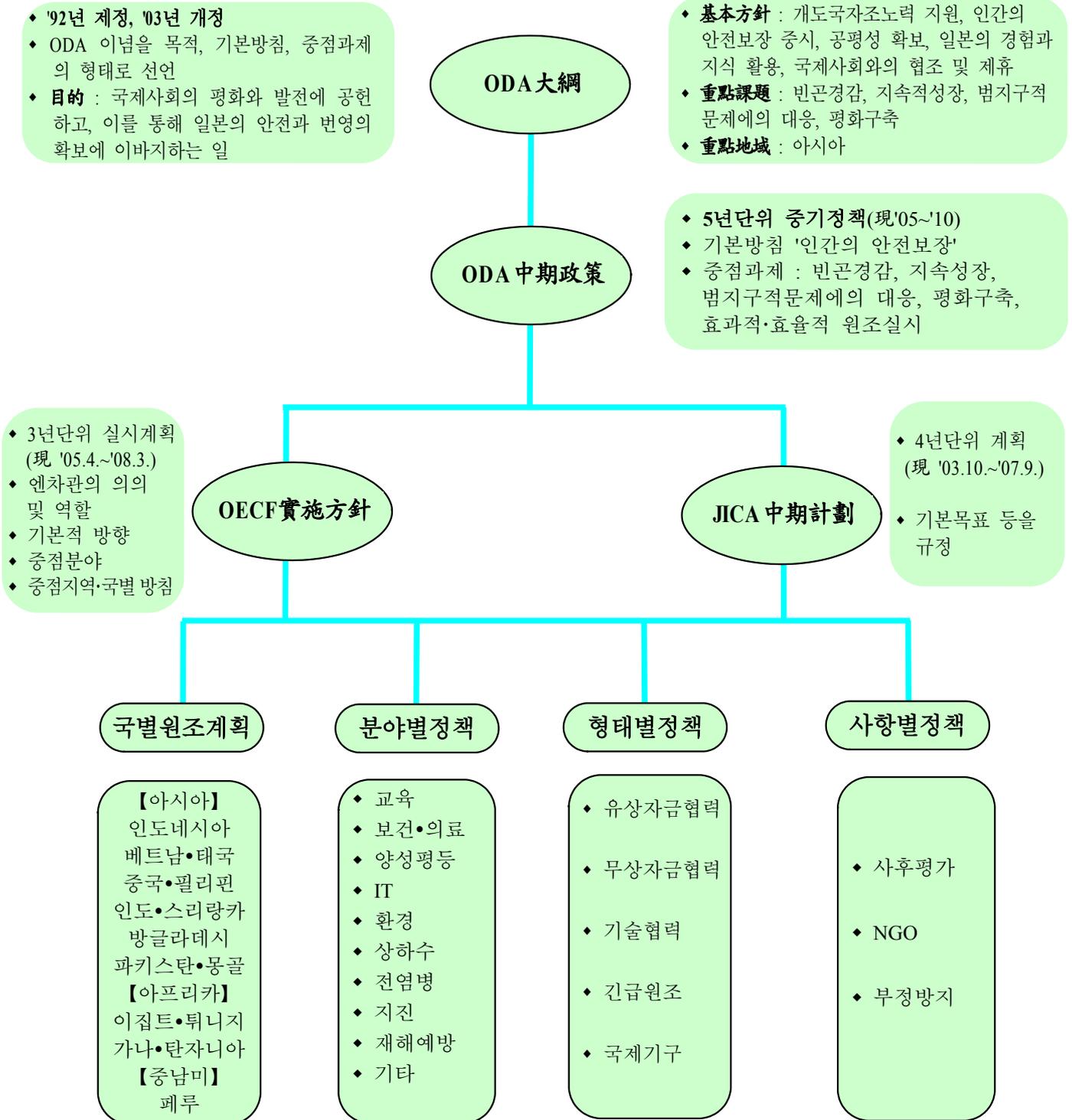
[자료출처 : OECD OLIS에서 집계]

[작 성 자 :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2】

일본 ODA의 정책구성 체계도



[작성 자 : 오용근, oh_yongkuen@koreaexim.go.kr]

목차보기